

## ■ ( 언론 동향 ) 2022.2.22. “광남일보” 보도

### ○ [기고] 안정적인 비료 공급대책 마련해야

국제사회는 지금 탄소배출 감축 합의에 따라 신재생·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국가별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한 바 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요소비료는 국내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소질 화학비료다. 요소는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데 중국이 호주와 무역분쟁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이유로 석탄발전을 감축시켜 요소 품귀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농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요소 대란’으로 인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농업계도 크게 흔들렸다. 요소 품귀로 인해 화학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질비료 생산에 가장 많이 필요하는 요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전체 요소 수입량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요소 비중은 55.5%로 가장 높다. 이어 산업용은 34.7%, 차량용은 9.8% 정도다.

정부에서는 중국발 리스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요소 품귀로 인한 농번기 비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 84만9000톤 중 88%에 달하는 74만500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은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했다. 농업인은 가격 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료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꼭 필요한 자재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올라 결국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중국 비중이 높은 요소 수입처를 중동 국가 등 다변화를 위해 비료업체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 할당 관세 적용 지속 등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2. 23.(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탈세계화 흐름을 거치면서 재편될 것으로 공공연하게 예측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주요 수입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산업이다. ‘사석위호(射石爲虎)’.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화살이 돌을 뚫었다는 사자성어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석위호의 정신으로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의 기틀을 마련해, 농업인은 비료공급의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귀현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장 >